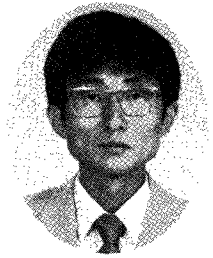


反核運動을 보는 視覺과 對應姿勢



崔 光 植

〈韓國에너지(研) 原子力安全센터
檢査1室 先任研究員〉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필자는 우선 필자 자신이 원전규제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Pro-nuclear이며, 따라서 부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감정적인 반핵운동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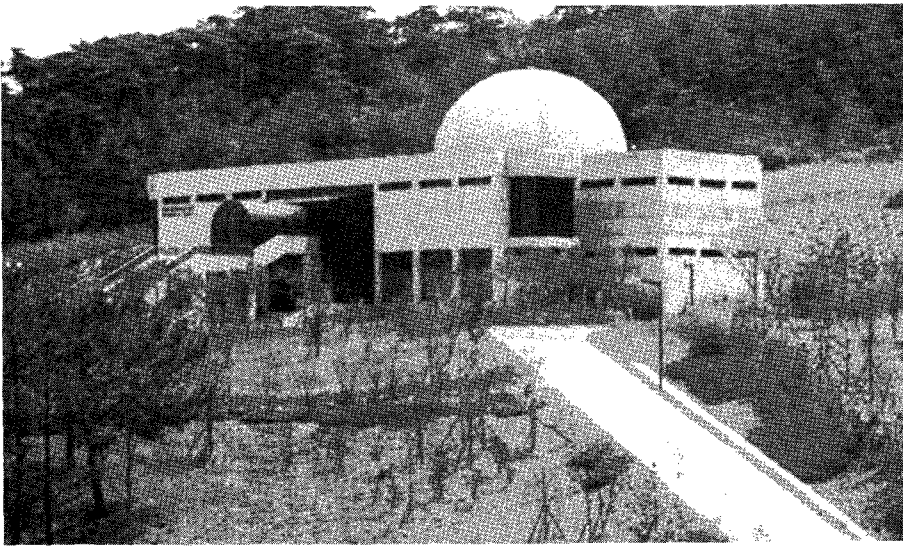
그러나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는 법이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할때 소위 Anti-nuclear 들의 반핵 및 반원전운동의 양태에 대하여 원전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그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원전추진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우선 얻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적'으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 원자력산업 1월호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반핵이 그들의 '일'이라면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찬핵이 직업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아무리 원자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여도 그것이 혼자 부르는 노래 또는 우물속의 합창이어서는 이른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즉 반핵론자들의 주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만을 수용하여 원전운전을 중지할 수 없는 것처럼, 찬핵론자들만의 주장을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라는 이름하에 쉽게 수용해버리는 정책결정 방식도 건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반핵론자들 중에는 체질적인 반대주의자들도 있고 그것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부류도 있을 것이나,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여야 할 분명한 하나의 '현상'이므로 우리는 이 현상에 현명하고 실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핵론자들 중에는 진지한 환경보호론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갖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병들어가는 지구의 종말을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V. 게오르규가 지적하였듯이 과거엔 잠수함에 토끼를 길렀는데 함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토끼가 먼저 질식사하여 쓰러지므로 승무원들이 안전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시인이 한 시대의 억압에 대해 이러한 토끼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진지한 환경론자들의 선지자적 경고는 토끼 처럼 나중에 올 더 큰 비극을 예지하고 이에 대처하게 해준다는 측면



◀영광원자력 발전소 전시관 전경.

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그 토끼를 잠수함에서 들어낼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않으므로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간에 그들의 발언에 꾸준히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여론 내지는 반핵세력의 공격이라는 작은 매를 자주 맞아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것을 피하여 안일하게 지내다가 치명적인 칼을 맞는 것 보다 나은 것이며, 예방주사를 맞는 작은 아픔을 피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법이다.

또한 '등에'가 소에 붙어서 피를 빨고 아프게 함은 소의 입장에서서는 괴롭고 귀찮지만 이러한 등에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으며, 한 국가가 독재로 가려할때 이를 견제하는 듣기 싫은 소리를 서슴치않는 등에 같은 지성인이 있을때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반핵세력의 존재는 원전추진세력들의 안이해지기 쉬운 정신상태에 경종을 울리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설사 그들 중에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크게는 그 시대에서는 비난받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

들에 의해 진보되어 온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Pro-nuclear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전운전을 중지한다든가 원전건설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으며,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효과 등의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할때 원전건설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전추진도 우리의 수정할 수 없는 선택이며 현실이고, 또한 반원전운동의 존재도 현실이라면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필자는 결국 원전을 계속 운전하고 원전건설을 추진하되 그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인에 의한 감시기능, 언론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이 되리라고 믿는다.

반원전운동의 논리에 대항하는 원전추진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으며 그것이 제대로 잘 기능하고 있고 그 구성인원들의 업무방식과 의사결정과정

신뢰할만 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사업자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원전은 정말 안전하다고 높이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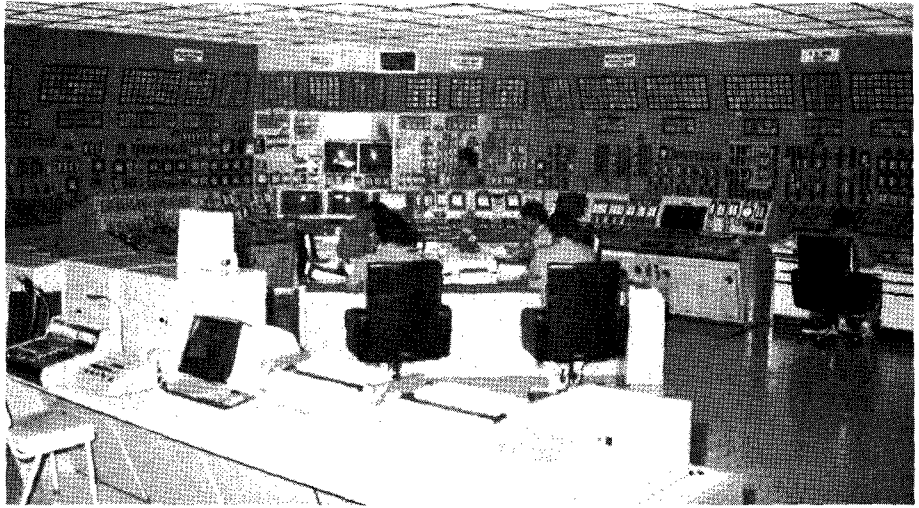
수년전에 모회사사장이 직접 TV에 나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제품을 만들었노라고 광고한 적이 있는데 그런 약속의 말은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여도 금전적인 손실 외에는 별 피해가 없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년전 박종철군 사망사건때 치안본부장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의 결과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예라든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시대에서 한 단체가 그 양심과 진실을 믿어달라고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명의 확신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다. 이는 국민들이 한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의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mechanism*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불신이 이미 이 시대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필자는 국민에 대하여 원전관련종사자들이 신뢰성을 획득하여 정상적인 원전건설을 추진하기에 지장이 없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원전사업자는 원전을 설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업자의 체계가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그것의 안전성을 규제 관리하는 제도가 규제활동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도록 잘 정립되어 있어 안전 규제가 제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실히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볼때 1986년도의 원자력법개정시 이루어진 원전핵심기술자립계획에 있어서의 효율성 확보를 구실로 한 안전규제의 완화(설계 및 공사방법신고서 대신 자료제출, 사업자 자체검사로 법정규제검사의 일부 갈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동네 개울상류에 화학공장이 있다고 할때 그곳에서 폐수를 정화시켜 흘려보내는 지 그대로 내보내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우리의 아이들이 들어가 놀 수도 있는 개울물에 유독폐수가 흐르는지 여부는 분명 우리의 큰 관심사인 것이다. 이때 우리는 그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했는지를 궁금해 할 것이고, 그런 시설이 있다면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다. 우리는 그 회사사장이 믿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엘리트라고 해서, 그가 우리의 선배라고 해서, 그들도 가족을 가진 선량한 가장일 것이라는 사실로 해서 그가 우리집 옆을 흐르는 개울물에 폐수를 정화시켜 흘려보내리라고 믿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환경보호법이 잘 제정되어 있으며 보사부나 환경청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환경감시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그 환경청 간부가, 환경감시요원이 그 화학공장사장과 인척 또는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그래서 환경감시업무가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수행되도록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원자력안전센터 사업종합보고서에서 인용되어 정기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수십건이 도출돼 원전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데 대하여 원전종사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정기검사결과 몇건이 지적되고 시정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원전 및 규제기관을 포함하여 원전산업의 전체적인 구조자체가 건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바 이는 현재의 우리사회와 같이 각 분야에서 문제점이 노정되지 않는 곳이 없는 현실에서 원전만이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이 국민에게 인식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자신들은 그래도 성실히 온갖 노력을 기울여 원전 안전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원자력전문용어가 비전문가인 신문기자에 의해 수정없이 또는 왜곡되게 다루어지고 이것이 국민들을 오도하여 부당하게 반핵여론을 조성, 장기적인 에너지수급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일부 종사자들의 불평이 있는듯하나,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진정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수급의 차질문제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업무가 더욱 고달파지는데 대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집단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종전처럼 편안하게 보전하려는 집단이기주의가 존재하는 법이며 그것이 표출될 때는 대개 그럴듯한 명분을 갖추고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규제기관을 포함한 원전관련종사자들이 집단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자리에 대한 안보, 그리고 보다 업무가 번거로워지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편의주의적인 사고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자력산업계의 구조적인 허점들을 국민에게 자꾸 노정시켜 대중의 신뢰성을 상실함으로써 잠재적인 Pro-nuclear group인 과학자나 원자력관련인사들

지 '이러다가는 나도 반핵운동에 나서야 하겠다'는 탄식을 하고 실제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현재 원자력산업종사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감을 크게 상실할 만한 사건은 아직 없었다고 보나 의혹의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 즉, 반원전단체들의 주장과 보도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적극 찬동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원전산업종사자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당장은 손해가 같 것 같은 정보나 사실이라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전산업이 운영하는 조직의 건전성, 그 의사결정과정의 건전성, 규제제도의 건전성과 독립성, 관련법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을 성실히 보여 주고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비이성적인 행동과 요구에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끈기있게 성실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원전관련산업에 종사하며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및 전력요금으로 보수를 받는 우리들의 당연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8월초에 각 언론, 방송사에서 크게 보도한 영광원전 주변주민의 '무늬아'파동

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조심스럽고도 성실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리라고 보며 결코 일처리과정에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들을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애초 이글은 방법적으로 반원전의 입장에서 보기로 전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러한 주민들의 심리의 일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시를 한 편 인용하고자 한다.

영광에 가서

박 봉 구

조상 대대로 팍팍한 벼논이나 부치고
기껏 큰벌이라야 끼룩끼룩 처량한 조기나
잡던 벽촌에
제삼의 불이 들어왔으니
세상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세우면서
떠들었다
그래 세상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땅을 팔아버린 무지랭이들은 기껏해야
발전소에 가 잡일을 거두고
발전소가 설때마다 저들 객지 기술자들은
염려 하나 할 것 없다는데
자기네들 먹을 물은 수백리 떨어진 고창 아산
댐에서 끌어오고
촌 사람들만 자칫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물 마시라네
무지랭이들한테는 아무 필요도 없는
백화점을 짓고 색주가만 즐비하네
제삼의 불을 발명하고 키워가는 명석한 머리
들이
그래 사람살이는 이리도 낭떠러지에 버려두어
도 좋은가
발전소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먹고 번진 플랑크
톤 탓에

가마미 천금의 해수욕장을 망쳐
생계가 막연해진 사람들이 발전소 문앞으로
달려든 날

이미 옛말이 된 영광 굴비가

서울에서 가짜로 되살아나 온 시장을 누비고
있었다 (엔터프라이즈 9월호)

‘영광에 가서’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영광주민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작가가 영광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을 가짜 영광굴비와 연결시켜 써본 것인듯 하다. 필자는 실제 한전직원들이 식수를 멀리 아산댐에서 끌어오는지, 플랑크톤이 폐수를 먹고 번져 해수욕장을 망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 시에서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심정적 불안감의 일단을 엿볼 수 있으리라 보며 이를 ‘एं터리’ 또는 ‘근거없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명석한 머리’만을 계속 꺾어 쳐들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심리에 대한 이해와 진지한 연구, 이의 해소를 위한 끈기있고 성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본사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이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항상 일이 막상 터져야 비로소 그것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한전본사에서 원자력안전실을 신설하여 이러한 PA문제를 전담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체계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바이며, 특히 반원전 단체 보다 원전 주변주민을 상대할때는 설사 억지주장 및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되 결코 고압적이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서는 향후 원자력산업을 추진해나가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